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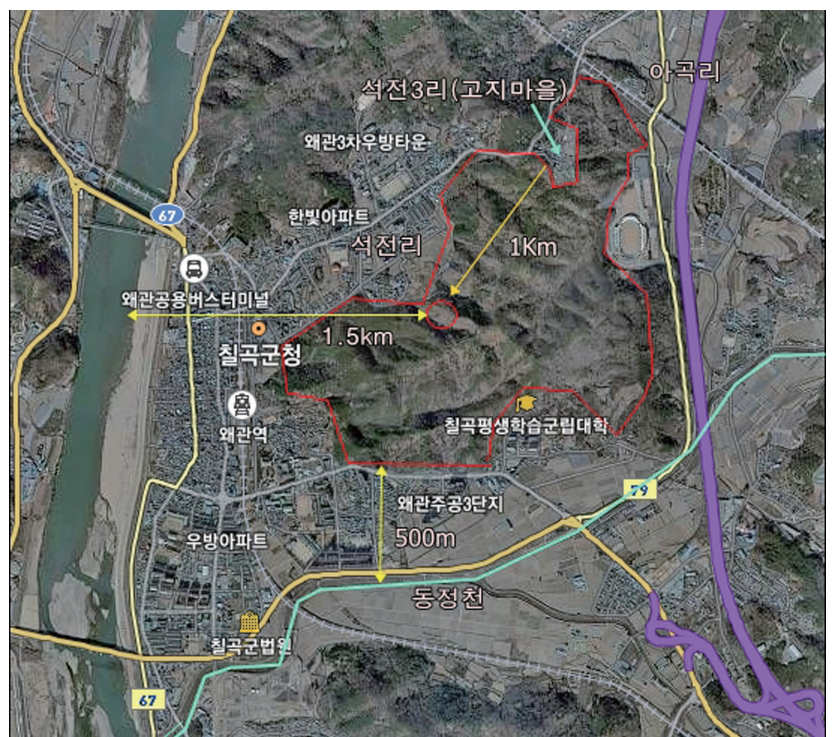
주한미군 고엽제 불법매립 진상규명 촉구

주한미군 고엽제 불법매립 경과(언론 보도 중심)

- 2011년 5월 19일, 1978년 왜관 캠프 캐럴 기지에서 근무한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의 애리조나 지역 신문과 인터뷰로 고엽제 불법 매립 사실이 국내에 밝혀짐.
- 이 증언에 따르면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 드럼통 250여 개를 2개월에 걸쳐 묻었다고 함. 이후 그는 국내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당시 매립한 고엽제가 205ℓ 들이 드럼통으로 600여 개이고,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가 포함됐다”고 증언을 함.
- 5월 20일, 환경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으나 주한미군의 거부로 캠프 캐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부대 주변 지역과 하천에 대한 사전 조사만 진행.
- 5월 21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국방부 및 환경부와 일을 함께하며, 가용한 모든 자료들을 그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발굴작업이 필요하다면 양부처 관계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이다”라고 밝힘.
- 5월 22일, 주한미군 측에서 한국 정부의 민관조사단의 부대안 조사를 허용기로 함.
- 5월 23일, 환경부 조사단과 왜관 주민 대표 그리고 민간단체(녹색경북21)와 기자로 꾸려진 민관조사단이 왜관 캠프 캐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전조사의 형태로 고엽제 매립 장소인 헬기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끝냄.
- 5월 23일, 미8군 사령부는 브리핑에서 ‘왜관 캠프 캐럴 기지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알려진 지역 주변에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용액 등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1978년 매몰했다는 기록이 1992년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에서 발견됐다’고 밝힘. 그러나 1978년 매립한 화학물질 중에 고엽제는 없다 ‘고 주장함. 묻은 드럼통과 그 주변 40~60t 가량의 흙을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했으나, 이 때 옮긴 드럼통과 흙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밝힘.

- 5월 23일, 주한 미8군 사령부는 2004년 삼성물산에 의뢰한 조사에서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 지역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힘. 고엽제 매립 의혹 지역에 대해, 2004년 13개의 시추공과 지



▲ 위성지도 상 경북 칠곡군 왜관을 위치(붉은 색 범위). 지도에는 기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산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고엽제 매립 유력지인 헬기장(붉은 원)은 기지 북쪽 석전3리에서 서남쪽으로 1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낙동강 본류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이다. 또한 남쪽으로는 낙동강 지류인 동정천이 흐르고 이곳으로 미군기지에서 사용한 하수 등이 유입된다. / 오마이뉴스 2011.05.26

하투과레이더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1개 시추공에서 다이옥신이 1.7피피비(ppb)가 검출됐음. 당시 전국 평균 0~0.119ppb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임.

- 5월 24일,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에도 1963~1964년 사이에 여러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사실이 밝혀짐.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 중대원으로 캠프 머서에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 씨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근무당시에 불도저로 구덩이를 파서 고무 옷과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백 갤런(1갤런=약 3.8ℓ)을 버렸다고 밝혔음.
- 5월 24일,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968년 주한미군의 '식물통제계획 1968'에 따라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고엽제 8,800드럼을 살포했음. 당시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이 투입됐다는 사실 밝혀짐. 이 사실에 기초해서, 한미 양국 최고위층의 합의로 한국 정부가 1968년 미국에서 대량의 고엽제를 반입해 비무장지대(DMZ)에 살포하고 남은 고엽제를 처리하는 데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됨.
- 5월 24일, 1991년 미 공병단이 캠프 캐럴, 용산기지, 주일미군기지인 자마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양과 처리에 관해 보고한 용역보고서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공개함.

자료 내용에는 캠프 캐럴은 '주한미군 군수기지의 사령부로서 최대의 유해물질 발생지'라고 기록돼 있다. 또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에서 448드럼의 PCBs(폴리염화바이페닐)를 환경 관련 한국사무국의 허가를 받고 국내 처리업자와 계약해 처리했지만 처리 허가와 처리 과정을 감시한 것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고 기록돼 있다.

PCBs는 변압기나 축전지, 살충제, 접착제 등에 쓰였던 화학물질로 70년대 독성이 발견된 뒤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안 씨는 '한국에서 미군 군수창고 역할을 하는 곳은 캠프 캐럴 외에 부산 개금동 일대, 인천 부평 산곡동 일대 등 두 군데가 더 있다며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5월 24일, 안치용씨는 2009년 1월 25일자 미국



관보를 확인해 미 재향군인청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따른 미군 장병들의 피해보상 범위를 당초보다 2년 확대했다는 사실을 밝힘. 관보에 따르면 고엽제 피해보상 범위를 68년 4월 1일~69년 7월 31일로 제안했으나 의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71년 8월 31일을 피해보상 마지막 일자로 확정했음.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종결시점인 69년 7월 이후에도 심각한 고엽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추가 살포 또는 살포에 따른 위험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5월 24일, 안치용씨는 지난 1960년대 비무장지대에 뿌려진 고엽제가 발표된 양보다 51배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함. 1999년 우리 정부는 1968년 맹독성 고엽제인 모뉴론 살포량이 7,800파운드(3.5톤 분량)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엽제 전문가인 알린 영 박사가 미국 국방성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고엽제 보고서에는 39만 파운드(180톤)가 손으로 직접 뿌려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5월 25일, 정부 소식통을 빌어, "전국 98개 미군기지에 각종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캠프 캐럴을 비롯해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다"며 "과거 1960~70년대에는 (주한미군이) 이들 화학물질을 사용한 뒤, 땅에 파묻는 식으로 폐기 처분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보도됨.
- 5월 25일, 녹색연합은 최근 강원도 민간인통제선 지역 주민과 인터뷰한 결과, 지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DMZ 내 고엽제 살포 작업에 민간인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미 육군 2사단 사령부에서 복무한 래리 앤더슨 씨는 "2사단 전체 창고에 저장돼 남아 있는 모든 다이옥신을 없애라는 명령이

주한미군 전 부대에 내려졌다”라고 새롭게 주장함.

- 5월 25일, 한미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한미주둔군기지(SOFA) 환경분과위 개최가 추진됨.
- 왜관 캠프 캐럴 기지에서 1960년대 말부터 33년간 근무한 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구자영씨의 증언에 따르면, 1978년 캠프 캐럴 기지내에 화학물질을 묻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힘. 1972년에도 캠프 캐럴 내 BOQ(독신장교숙소) 인근 공터와 소방서 앞 지역에 테니스장 크기의 구덩이를 자신이 불도저를 동원해 팠으며, 그 두 곳의 구덩이에 비슷한 양의 독극물이 매몰됐다고 밝힘.
- 처음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에 주한미군측은 1992년 보고서를 인용하여 고엽제를 묻은지는 모르겠으나 화학물질은 묻었으며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어딘지는 모르나 옮겼다고 발표함. 그러나 5월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고엽제를 묻은 사실의 근거가 된 1992년 보고서가 정식 보고서가 아님이 드러남.
- 5월 31일, 칠곡군청에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이 내려와서 칠곡군청, 왜관민간대책위,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과 간담회를 가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과 수도원 대표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식적인 조사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함.
- 6월 1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서 칠곡군청, 칠곡군의회, 왜관 민간대책위와의 간담회 진행. 형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함.



- 6월 2일,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지 내 기초조사를 실시함. 6월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는 조사방법을 수질조사와 레이더 지표투과 방식으로 정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페드럼통이나 고엽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시 조사가 종결될 수 있음. 수질조사는 지하수 관정 16곳, 생활용수 6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시료를 한미 양국이 나누어 각각 조사하기로 하고 결과는 합의 발표하기로 함. 조사에는 주민대표가 포함되었으나 그 수가 적고 정부 측 전문가들로만 채워짐.
- 왜관 캠프 캐럴 기지뿐 아니라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경기도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도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남.

러브 캐널 사건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이 경기 부천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번 사건이 미국의 '러브 캐널(Canal·운하) 사건'과 유사한 방향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러브 캐널 사건은 화학물질 불법 매립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집단이주까지 하게 된 미국 최악의 토양오염 사고다.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고, 30여년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사건과 상당히 닮았다.

1800년대 말 시작된 러브 캐널 사업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의 두 호수를 길이 10km의 운하로 이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0년대 미국 경제불황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운하 자리에는 길이 1.6km, 폭 3~12m의 웅덩이만 남았다.

1940년대, 어느 화학물질 취급 회사가 이 웅덩이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폐기 화학물질 2만여t을 묻었다. 성토가 끝나면서 러브 캐널 자리는 평범한 주택가로 변했고, 학교가 세워지고 마을이 들어섰다.

30여년이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가로수와 정원의 식물이 말라 죽고, 하수구에서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주민들은 유난히 피부병, 심장질환, 천식 같은 질병들을 자주 앓았다. 1978년 한 학부모가 아들의 만성 천식과 신장질환이 학교 아래 묻혀 있는 화학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대부분 아이들이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러브 캐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한 미 연방 정부는 78년 이 지역을 '환경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240여 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한미합동 조사단의 문제점



토양 조사의 초점은 지하에 드럼통이 과연 남아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화학물질을 담은 드럼통이 발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79~80년 드럼통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미8군 공병대 문서를 통해 이미 확인이 되었고, 미군 측이 과거에 지표투과레이더(GPR)로 검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8군 사령부는 지난 2004년 지표투과레이더로 기지 곳곳을 살살이 검사하는 등 여러 차례 자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레이더를 쏘아 물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 장비 자체도 한계가 많습니다. 미군 스스로 이 장비로 조사

하는 경우 지하 물체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지하에 정체불명의 물질이 있거나, 진흙 또는 소금기 있는 토양에서는 결과가 잘못 나타날 수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직접 뚫어야 합니다. 조사의 관건은 토양의 오염여부이지 드럼통의 존재 유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조사 방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군은 그 동안 기지 내에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4년마다 오염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조사해봐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주한미군은 이미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3.2km²에 이르는 광범위한 기지 부지 가운데, 불과 9개의 관정에서 나온 물만 가지고 그 오염여부를 가리기는 어렵고 이미 미군들은 기지 내의 지하수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미군 스스로도 지하수 채취는 오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처음부터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신속히 대응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체 조사로 문제될 게 없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린 듯합니다.

주한미군 고엽제 불법매립 쟁점 및 의문

1. 고엽제 매립 범죄 34년간 숨겨온 미국, 왜 신속한 대응하고 있을까?

미군의 78년 캠프 캐럴에 고엽제 매립 범죄가 퇴역 미군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감춰질 사실이었습니다. 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고엽제 및 독극물 매립사실이 갑자기 밝혀졌으나 미군은 예전과는 다르게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지 내 방문을 허용했으며 신속하게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에 합의하고 몇 가지 사실들을 신속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사실에 접근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합동조사단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의 직접 조사에 대한 거부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

음에는 직접 발굴 조사를 밝히다가 이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78년 매립 이후 2년이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미군 스스로가 밝히



고 있으나 옮긴 장소와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 캠프 캐럴 한미합동조사 민간 전문가 참여와 한국의 직접 조사

캠프 캐럴 현장 조사를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은 참관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반환기지를 제외하고, 현재 주둔 중인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고엽제 불법매립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왜관 지역 주민 대표, 피해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환경단체 포함)가 직접 참여하여 은폐나 축소를 막아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왜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범죄만 있을까?

언론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까지 동원하여 고엽제를 비무장 지대에 뿌리게 한 사실, 부천 캠프 머서 독극물 매립 사실, 주한미군 2사단 전체의 다이옥신 보유 사실 등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체 90여개였던 주한미군기지는 이전 사업에 따라 중 47개가 반환되었고 40여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주한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한국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나?

주한미군은 비무장 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할 때 한국 군과 주민을 동원했습니다. 1999년에 우리 정부는 1966년 비무장지대에 살포한 고엽제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미국자료에 비해 51배나 적은 양을 살포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1978년 왜관 캠프 캐럴 기지에 고엽제를 묻을 때에 한국정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을 주장하지만 자기 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고엽제 살포 행위에 동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고엽제란

농약의 용도상 분류에 따라 낙엽제(落葉劑)에 해당하는 것이 고엽제입니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바로는 미군이 베트남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와 2·4-D계를 혼합한 제초제를 가리킵니다.

미군은 이 작전을 ‘오렌지작전’이라 불렀는데 이는 살포약제의 대부분(67%)을 점한 것이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였기 때문입니다. 이 명칭은, 다른 용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드럼통에 오렌지색의 페인트를 칠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제 약제의 색은 오렌지색이 아니라, 드럼통에 칠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매스컴에서는 이를 ‘고엽작전’이라 보도하고 여기에 쓰인 약제를 고엽제라 하였습니다. 1969





년 미국은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와 2,4-D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 이 약제의 사용을 중지하였습니다.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일반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화학무기로 여기고 베트남전쟁 이후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북베트남(Vietcong)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수송로로 이용되던 온 밀림을 제거하고 시계를 청소할 뿐 아니라, 경작지 농작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960~1971년까지 베트남국토의 15%에 해당되는 60만 에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2,000만 G/A의 고엽제를 살포하였습니다. 바로 이 고엽제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다이옥신(Dioxin)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치사량이 청산가리(Kaliumcyanid)보다 10,000배, 비소(AS)의 3,000배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1g이면,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독극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고엽제 사용에 관한 별다른 지시나 주의사항도 없었고, 특히 비행기로 공중 살포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엽제가 쏟아지는 곳

을 쫓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맞으려 했습니다. 부대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병사들은 고엽제 가루를 철모에 담아서 맨손으로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 고약한 다이옥신은 우리 참전 용사들의 눈,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아무런 여과 없이 전신에 숨어 축적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국적에 관계없으며, 미군을 위시한 모든 나라의 장병들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의 다이옥신을 몸속에 축적한 채 전쟁을 마쳤습니다.

1970년대부터 참전국 장병들은 원인 모르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1978년경부터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고엽제의 후유증인 것으로 판단한 일부 환자들이 미국정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 정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철저히 이러한 사실을 통제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입이 막혀 수많은 참전용사들은 베트남 풍토병이라는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다가 40대의 아까운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도조차도 병의 원인을 잘 몰랐고 그저 “베트남 풍토병”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미군기지 환경피해 사례



- 메디슨 기름유출 사건: 1998년 의왕시 백운산 기름 오염 사건
- 독극물 방류사건: 2000년 2월 용산미군기지 영안실에서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약 470병이 싱크대 하수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간 사건
- 파주 스토리 사격장: 2004년 스토리 사격장 확장공사로 산림훼손
-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2001): 2001년 원주시 태장동 캠프 롱 인근 기름유출
- 군산 기름유출 사건: 2003년 군산 미군기지 인근 논에서 기름띠 발견
- 군산 기름유출 사건: 2005년 유류저장탱크 오작동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농수로 오염
-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2008): 2001년에 이어 또 다시 기름유출(인근 농수로에 기름띠 형성)
- 용산기지 기름유출: 2001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부지의 집수정 지하수에서 유류 발견
- 의정부 캠프 홀링 워터 기름유출 사건: 2003년 의정부역 흥선 지하차도 벽과 바닥에 기름이 흘러내림.
- 매항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 마을 전체에 널려 있는 포탄들과 사격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

미군 부대 내에서 일어난 환경문제 왜 해결되지 않는가?

한미행정협정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입니다.”

고엽제 매립 관련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대표 및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5월 19일 왜관 주한미군 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이 폭로되고 2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엽제 매립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미국측은 그때마다 말바꾸기를 거듭하며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직후 환경단체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야4당이 모여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왜관 주민들 또한 즉각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왜관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의 요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바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공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과 오염된 국토의 원상회복이다.

지난 6월 2일 한미공동조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측이 주장한 수질조사, 레이더 조사방식만으로 합의된 공동조사 방법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의문을 가지며 나중에 어떠한 결과에 나오더라도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고엽제 및 화학물질이 묻혔을 장소로 지목되는 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레이더 조사 방식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수질조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존 지하수 관측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조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게다가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조차도 캠프캐롤 주변 마을의 대표나 왜관주민대표,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구성된 한미합동조사단은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이라 볼 수 없다.

미국측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엽제 매립 의혹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고엽제 매립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왜관 주민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조사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하며 한미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엽제 및 화학물질 유입경로, 보관 장소와 방법 및 종류와 총량, 매립, 이전, 처분 등 모든 자료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 캠프캐롤 주변 마을대표 및 왜관 주민대표,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한미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라.

셋. 모든 매립 의혹 장소에 대한 토양 시추조사와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발굴조사를 실시하라.

넷. 캠프캐롤 인근 마을, 왜관 지역의 암 발생 등에 대한 지역 및 주민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고엽제 매립 의혹을 푸는데 은폐나 축소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과정으로 임하기를 촉구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의 보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왜관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왜관 캠프캐롤 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1년 6월 7일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